

일본의 소득격차 확대 배경 및 시사점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고정화로 양극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소득격차 확대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로 청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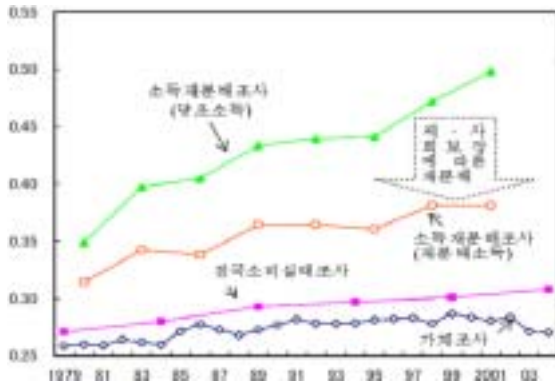
일본정부는 경제성장으로 고용을 확대할 경우 소득격차는 쉽게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호조에 따른 고용확대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성장만으로는 소득격차 해소가 어려울 전망

이는 기업이 신규졸업자 및 저임금 비정규직을 선호함으로써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장기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고용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

(저소득층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

- 최근 일본에서는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된 데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불황이 심화되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상승
 - 경상소득의 지니계수는 90년대초 0.43 수준에서 2002년에는 0.5로 높아졌으며 사회보장 등 소득재분배 후의 지니계수도 0.36에서 0.38로 상승
 - 특히 빈곤률이 10년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 상승하는(95년 8% → 05년 15.3%) 등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생활보호대상 세대수는 1995년 월평균 60만 세대에서 2005년에는 67% 가량 증가한 100만 세대를 상회할 전망이며 무저축 세대의 비율도 같은 기간에 10% 수준에서 23%로 상승

주요 조사별 세대소득의 지니계수



자료: 일본 내각부

무저축세대 추이



자료: 금융광보중양위원회

- 대부분의 국민이 소득격차 확대를 실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학계 및 언론 등에서는 소득격차 확대가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 일반인들은 최근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노력하더라도 격차를 쉽게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일본도 점차 미국과 같이 소수 상류층과 다수의 하층민으로 분화되는 양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중 절반 이상(59%)은 앞으로도 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
 - 소득격차 확대를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승자·패자’, ‘상류·하류’ 등이 유행어로 등장
 - 2005년 9월 출간된 ‘하류사회’(下流社會 - 新たな階層集團の出現, 三浦 展)라는 책은 소득격차 확대가 자녀의 교육격차를 초래하여 계층간의 격차를 고착화시킴으로써 일본이 하류사회로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
- 언론 등에서는 소득격차 확대와 더불어 소기업·대기업간 격차, 지역간 격차 및 기술의 격차, 정보의 격차까지 제기하면서 일본을 격차사회 또는 분단국가로 표현

-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일본사회의 민감한 반응은 전통적으로 분배를 중시해오며 전국민이 중산층이라는 의식이 강했으나 최근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 1980년대의 소득격차 확대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고소득층의 자산 효과에 의한 것으로 중산층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반면
 - 최근에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감소 및 저소득층의 확대에 의한 것이기 때문

(소득격차 확대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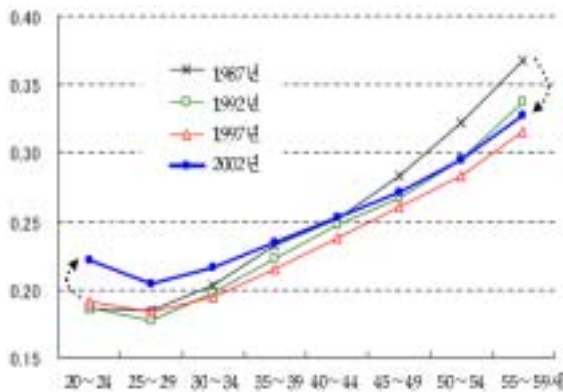
- 야당 등 사회 각계의 소득격차 확대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소득격차 확대가 고령화 및 단신세대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심각하지 않다고 일축
- 내각부는 통계상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이것이 임금 또는 소득의 격차에 기인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자산격차는 오히려 감소추세라고 주장
 - 세대구성원의 나이가 많을 수록, 인원이 적을 수록 소득격차가 커지므로 고령화 및 단신세대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소득격차 확대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 大阪대학의 오다케 교수 등 일부 학자들도 이에 동조
- 미국식 개혁이 소득격차 확대를 초래했다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 고이즈미 수상은 승자와 패자는 항상 있었으며 지금까지 일본사회의 평등 의식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것으로 어느 정도 격차가 생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반박
 - 나카가와 자민당 정조회장은 개혁을 가속화하여 경제가 성장하면 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므로 개혁이 격차 시정의 좋은 대책이라고 주장

□ 그러나 소득격차 확대는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의 영향도 있으나 경기침체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및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 연령대별 지니계수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상향 이동하는 가운데 30대 이하 연령대의 상향 이동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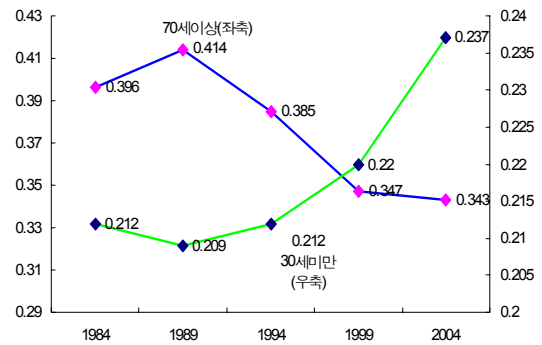
○ 특히 70세 이상 세대의 지니계수는 90년대 들어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 30세 미만 세대의 지니계수는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고령층보다는 청년층의 소득격차가 더욱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줌

평준화되는 연령별 지니계수 추이



자료: 노무라금융경제연구소

청년층과 고령층의 지니계수 비교



자료: 전국소비실태조사

— 청년층의 소득격차 확대는 불황극복을 위한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 및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 등으로 정규직 고용이 감소하고 청년실업과 저임금 비정규직이 증가하여 청년층의 소득이 감소된 데 기인

○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1995년 6% 내외에서 2004년 10% 가까이로 높아졌으며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 인구도 같은 기간 중 2.6배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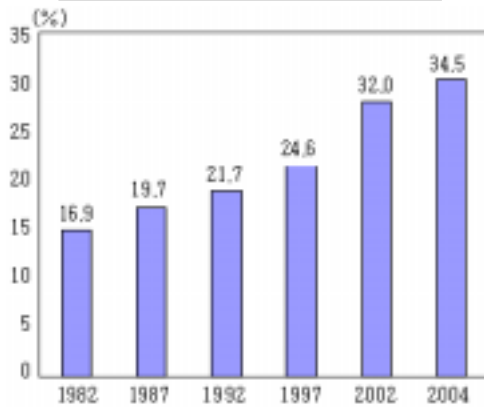
*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재학도 통학도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며 가사도 하지 않는 비노동력인구 등

○ 일본 총무성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 고용은 1995년 이후 10년간 369만명 감소한 데 반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이하인 비정규직 고용은 559만명 증가하여 전체 고용자 중 비중도 약 10%p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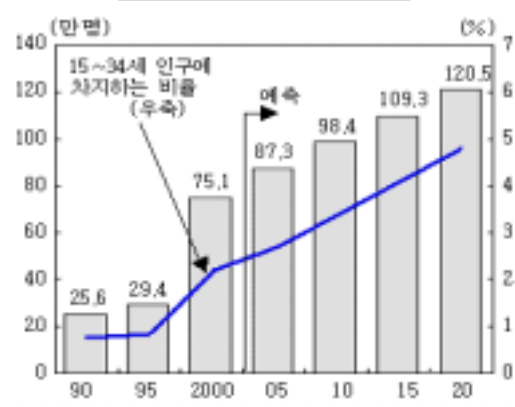
· 비정규직 고용은 파견사원, 계약사원, 파트타임 고용 및 프리터*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규직 평균 연수입은 531만엔(2004년)이나 파견사원은 226만엔, 프리터는 167만엔에 불과

* 프리터(Free + Arbeiter)는 일을 하긴 하나 특정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등 저임금으로 단기간의 취업상태를 반복하는 사람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추이



니트인구의 증가추이



자료: 리쿠르트, 총무성 등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고착화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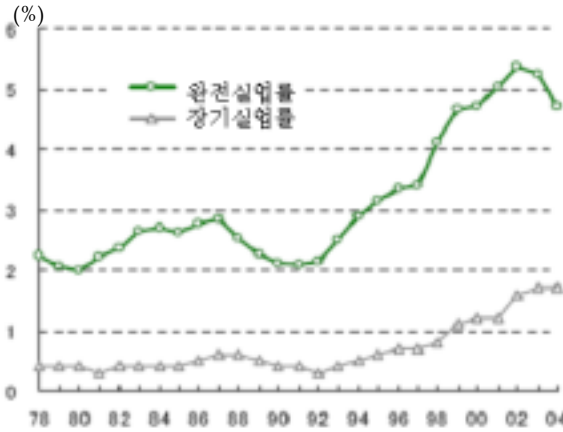
□ 소득격차 확대의 주원인인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전망

— 특별한 대책 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비정규직은 전체 고용자의 50%에 달하고(2004년 34.5%) 니트인구도 10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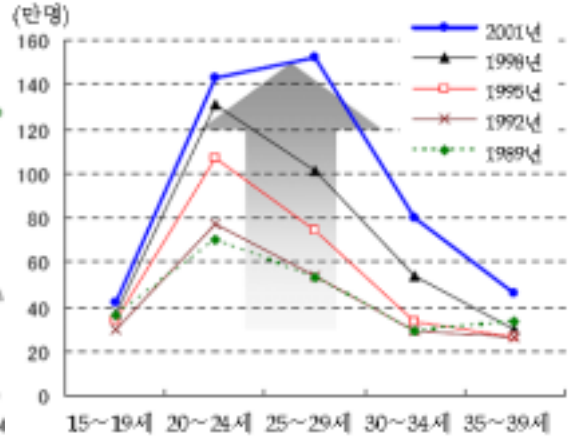
○ 2002년 이후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장기실업률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장기실업자의 25% 수준이 25~34세에 속해 청년층의 장기실업이 심각

* 장기실업자는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이며, 장기실업률은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에 대한 장기실업자의 비율

완전실업률과 장기실업률 추이



연령별 프리터증가와 고정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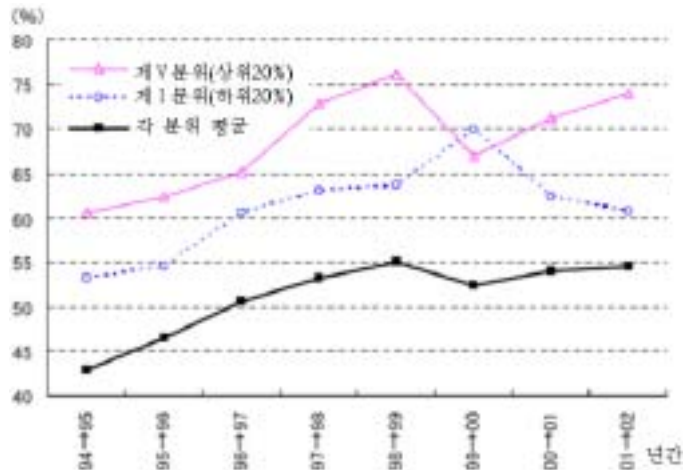
자료: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

- 이는 최초 고용형태가 프리터 등 비정규직인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매우 어려우며 니트의 경우 잦은 취업실패로 구직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
 - 프리터나 니트의 경우 구직활동에 나서더라도 수년 동안 아무런 학업 및 취업경력이 없어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리크루트 연구소가 최초 직업을 프리터로 시작한 34세 이하의 청년층의 현직을 조사(2004. 6)한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22.5%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프리터를 지속하고 있으며 약 6% 정도가 파견사원 또는 계약직 등으로 전환
 - 전문가들은 프리터 및 니트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당수가 스스로 사회와의 교류를 단절하는 심리를 갖게 되므로 정상적인 고용 또는 사회복귀가 어려워진다고 지적
- 실업 및 비정규직의 장기화는 저소득층이 고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양극화를 심화
 - 이들은 자신의 세대에서 저소득층에 속하게 되며 자녀들도 학력격차를 통해 저소득층에 머물게 되는 등 소득격차를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며 이는 고소득층의 고정화와 더불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

- 비정규직의 소득은 정규직의 절반 이하이며 니트 상태가 5~10년 지속될 경우 평생소득은 정규 근로자의 15% 내외로 저하(제일생명경제연구소 추정)
- 실제로 5분위 소득계층내 잔류율*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왔으며 소득 상위 20% 및 하위 20% 계층의 잔류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됨을 시현

* 5분위 소득계층이란 사회 전체의 소득을 5단계로 층화한 것을 말하며 분위내 잔류율이란 전년과 동일한 소득계층에 잔류한 가계의 비율을 말함

소득계층 분위내 잔류율 추이



자료: 노무라 금융경제연구소

- 또한 저소득계층의 고정화는 소비 및 조세수입 감소, 사회보장 지출 증가 등의 경제적 문제 이외에도 사회불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청·장년층의 소득감소는 결혼을 미루거나 못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잠재성장력을 약화시킴
- 게이오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대학졸업 후 프리터가 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미혼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그 격차가 23%포인트에 달함

(성장만으로는 소득격차 해소 어려움)

□ 성장에 따라 고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비정규직 고용임에 따라 성장에 의한 고용확대만으로는 소득격차를 완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기업은 투자확대 및 2007년 이후 대량 정년퇴직 예상에 따라 고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및 여성, 고령자 등이 중심

○ 신규졸업자의 취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닛세이키초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근 2~3년간 신규채용직원 중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15.1%에 불과하며 65.8%가 종전과 같다, 17.6%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응답

○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시 대응책으로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고령자 고용확대 및 정년연장을 들었으며 그 밖에 여성정규직 채용 확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고령자 및 여성의 고용확대는 정부시책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평가

— 기업은 기본적으로 신규졸업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도채용 시에도 프리터나 장기실업자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극히 낮음

○ 중도채용을 위한 이력서 평가시 졸업후 실업 또는 프리터로 지낸 것에 대해 감점하는 것이 일반적

일본기업의 중도채용자 이력서 평가

	(응답률, %)				
	이유가 불분명한 전직	전직회수가 많음	졸업 후 무취업 기간	졸업 후 프리터 기간	휴학
감 점	95.9	89.1	75.9	66.4	20.5
무 관	4.1	10.9	24.1	33.6	79.5

자료; 고용정보센터, 국내외기업의 채용에 관한 비교조사연구보고서(2005.3)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확대되면 소득격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낙관하고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조치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

— 일본정부는 2006년 중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나 그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기업에게 1인당 월 5만엔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25~34세의 구직자를 일정기간 시험 채용한 후 계속 고용을 결정하게 하는 시험고용제를 확대하고

직업소개소를 방문한 청년 구직자에 대해 1명의 서포터가 1대 1로 취업을 지원하는 Job Supporter 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

— 전문가들은 소득격차의 축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고용확대보다는 정규직 고용의 확대 및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축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

○ 수동적인 취업알선보다는 프리터, 니트에 대한 노동의욕 고취,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 지원 등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한 비정규직 규제완화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

○ 또한 일본의 고용정책 관련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취업능력 확충에 대한 지출 비중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일본의 고용관련 지출규모는 미국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실업급여 등 소극적인 실업 대책에 지출이 치중

주요국의 고용정책 관련 지출 비교

구 분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02~03년	02~03년	02~03년	02년	02년	02년	02년
취업알선 관련 지출	0.25	0.08	0.22	0.75	0.62	1.08	0.53
직업소개	0.18	0.04	0.17	0.23	0.18	0.37	0.12
취업조성	0.06	0.01	0.03	0.22	0.35	0.21	0.33
장애자대책	0.01	0.03	0.02	0.30	0.09	0.50	0.08
취업능력 관련 지출	0.05	0.05	0.15	0.42	0.63	0.31	0.47
교육훈련	0.04	0.03	0.02	0.32	0.23	0.29	0.30
청년대책	0.01	0.02	0.13	0.10	0.40	0.02	0.17
실업 관련 지출	0.47	0.57	0.37	2.13	1.80	1.05	2.06
실업급여	0.47	0.57	0.37	2.10	1.63	1.04	1.53
조기퇴직급여				0.03	0.17	0.01	0.53
합 계	0.77	0.70	0.74	3.30	3.05	2.44	3.06

주: 각 비율은 명목GDP대비 지출금액 비율(%)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2004)'

- 특히 장기간 니트나 프리터에 머무르면서 사회와의 단절현상을 보이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단순한 취업능력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미국과 같이 니트 등 장기실업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멘탈헬스케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
- * 2002년기준 미국의 노동자 1만명당 멘탈헬스케어산업 종사자는 60.5명인데 반해 일본은 2001년기준으로 동 8.3명에 불과
- 고용정책 이외에 세제도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
- 즉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금융소득과 자본소득의 종합과세 등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에 부담이 큰 소비세의 큰 폭 인상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
- 특례조치로 10%를 적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소득세의 세율을 당초대로 20%로 환원할 필요성도 제기
- 지난해 말 자민당이 제시한 세제개편안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수증대만 고려하고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배려가 없다고 비판